참사 책임 두고 與野 공방… 진상규명 시험대 오르는 尹

희생자들 장례 절차 마무리 단계
국민의힘 "국정 조사할 때 아냐"
민주·정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태원 압사 참사가 벌어진 직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국가애도기간이 5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애도기간인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서울시청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매일 찾아 조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청광장에 합동분향소가 시민들에게 공개되기 직전,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김대기 대통령실비서실장 등 참모들과 첫 조문을 했다.

이어 1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사고수습과 후속 조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참사 현장인 이태원을 방문해 조문했으며 2일부터 5일까지는 매일 오전 서울시청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또, 윤 대통령은 비공개일정으로 지난 1일 희생자가 안치된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으며 김 여사도 지난 2일 서울과 경기지역의 빈소를 찾아 추모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4일에는 조계사에서 열린 위령법회를, 5일에는 백석대학교 하은홀에서 열린 위로예배, 6일은 김 여사와 함께 명동성당 추모미사에 참석해 고인들을 기렸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행보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참사 직후 사고수습을 위해 부모의 마음으로 유가족을 위한 신속한 신원확인을 비롯해 부상자들의 치료 지원 등을 각별히 챙기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거듭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국가애도기간이 끝나고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진상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치권의 최대 관심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이번 참사의 책임에 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여부다. 여야는 국가애도기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정쟁을 삼갔으나,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된 만큼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등을 비롯해 이번 참사의 책임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이 장관의 파면 등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재방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회에 주어진 최우선 책무"라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집권 여당 국민의힘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던 만큼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다.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경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참사 직후 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나 이 장관의 거취 등에 대한 질문에 사고수습과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말을 아꼈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조계사에서 열린 위령법회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사과의 뜻을 표명함으로써 국가애도기간 이후 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가능성도 커졌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국민의힘, 특별위원회 구성 예고

참사 원인규명·재발방지 마련

민주·정의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대응
심리치료·재난안전 등 전문가로 구성

국민의힘이 이태원 압사 참사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당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예고한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뿐 아니라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정부 책임 규명' 차원의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자체 특위 구성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는 '정치 공세' 방어까지 고려한 행보로 보인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당내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설치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특위는 이태원 참사 관련 원인 규명·경위 파악부터 사고 희생자 및 부상자 지원 대책 점검, 유사 사고 재발 방지 차원의 법적·제도적 안전대책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차원에서 특위도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과 함께 심리치료·재난안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했다. 먼저 위원장은 경찰 출신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만희 의원이다. 부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형수 의원이 맡는다.

위원은 신의진 연세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제진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겸임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조은희·서범수·정희용·최연숙·박성민 의원 등이다. 당 정책위원회와 소속 의원들도 이태원 참사 재발 방치 차원에서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섰다. 먼저 정책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정우택·김기현·안철수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당이 이태원 참사 수습에 집중하면서, 차기 지도부 선출 관련 일정도 밀렸다. 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위원회 인선 논의를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구성 이후 공식 활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최영훈 기자 choiyoungkr@